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이후 새로운 GVC체제에 대한 전망

Prospects for a new GVC system after COVID-19 and the US-China trade war

허정* · 김동현**

[국문요약]

글로벌 통상환경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급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향후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전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고에서 바라보는 미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각 국가들은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경험한 바, 일부 민감한 품목의 자국 중심 생산과 수입구조 다변화를 통해 공급충격에 대한 단기적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체제를 수정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미중간 무역분쟁은 양국간 기술 탈동조화로 이어져 양분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초래하는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단, 양분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화된 글로벌 공급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주제어: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공급망

I. 서론

국제 통상과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전 세계에 두 가지 대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첫째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과 둘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인적, 물적 이동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무역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은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봉쇄 조치가 취해지자, 전 세계에서 생산되어 전세계로 소비되는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초기 의료 장비 생산과 소비에 타격이 발생하였고 이에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최근에는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의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의 생산 지연과 원자재 공급 부족은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각국의 생산자 물가를 상승시켰고, 이는 최근 ‘위드코로나’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Tel: +82-2-705-8518, E-mail: ecsjhr@sogang.ac.kr

**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경제학 박사과정, E-mail: brenze12@gmail.com

로의 방향선회로 발생한 경제회복세와 맞물려, 각국의 물가상승과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둘째,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미중간의 무역분쟁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전 세계 소비와 생산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공생관계는 기술 분쟁을 발단으로 신냉전이라 불릴만한 갈등에 직면했다. 양국의 상호 보복관세로 심화되던 갈등은 2020년 1월 1차 합의를 맺었지만, 그 이행 문제로 양국 관계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세계 경제 1, 2위를 차지하는 양국의 갈등은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글로벌 무역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양국의 국가정책은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 고에서,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통상환경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단기적 혹은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둘째,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적인 통상체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요컨대, 우선 코로나19로 드러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은 단기적, 국지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각 국가들은 생명 안전과 직결된 의료 장비나 공급망 등 핵심적인 소재, 장비, 부품을 중심으로 일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하거나 혹은 일부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예측치 못한 공급충격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국가 편중에서 벗어난 수입구조 다변화 방향으로 변형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은 이보다는 좀더 그 영향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 산업 기술 분야에서의 미중간 경제안보 이슈로 인해 양국간 경제 탈동조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제조 공급망의 양분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불러올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양분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개방형 공급망을 형성할 것이다. 이에, 각 국가들은 국제 경쟁력이 증명된 자국 산업 분야를 레버리지로 하여 국제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관련 국제 협상에 참여할 것이며, 그 결과 글로벌 기업들은 새롭게 양분화된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 최적화된 진입 전략을 취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전망하기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요약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성장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2장 2절에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아시아의 공급망 구축과 주요 특징에 관해 설명한다. 3장 1절에서는 코로나19의 전개 과정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과 전망을 서술한다. 또한 공급망 회복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전개 방향을 기술한다. 3장 2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드러난 미중 무역분쟁에 관해 서술한다. 양국간 무역분쟁의 전개과정, 촉발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양국 관계를 전망한다. 3장 3절에서는 향후 동아시아 GVC를 전망해 본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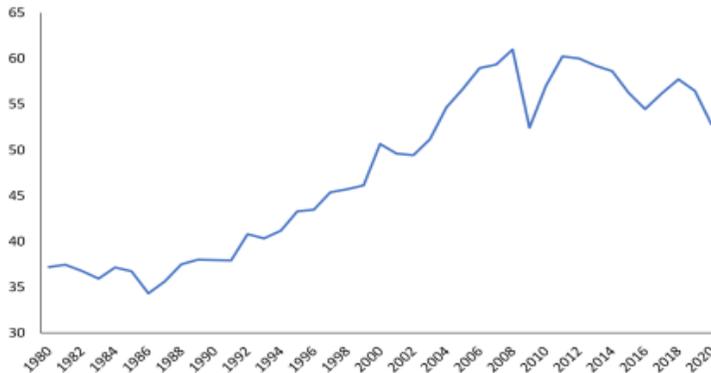
II. 코로나19 이전의 글로벌 통상환경의 전개

1. 글로벌 통상환경과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이하 GVC) 이 지금과 같이 구성되기 이전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은 한 공장에서 전 공정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 경우 국가 간 거래는 오직 최종재의 소비를 위해서 나타난다. 하지만 생산과 운송기술의 발전은 생산공정의 국제적 분절화를 가능하게 했고 중간재 생산단계에서 국가 간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제품을 세계 각국 생산의 비교우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국가는 중간재를 만들어 수출하거나, 이를 수입, 가공하고 최종 소비재를 수출하는 단계를 통해 GVC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기업들은 수직적 생산관계 (Vertical Relationship)를 이루고 국제 공급망 (Global Supply Chain)을 형성한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국제무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GVC 무역(즉, 중간재 교역)을 통한 새로운 생산방식 (비교우위에 근거한 중간재 수입과 최종재 수출을 통한 생산의 부가가치 창출)의 발달에 기인한다. <그림 1>을 보면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GDP 대비 총무역액 (수출과 수입의 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Borin and Mancini(2019)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전 세계 무역에서 GVC 무역 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40%에서 2010년 50%까지 상승하였고, 이것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전 세계 교역량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 (Amador and Di Mauro, 2015; World Bank, 2020)에서는 이 시기를 “GVC의 시대” (Age of Global Value Chain)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 세계 GDP 대비 전체 무역액 비중 1980-2020 (단위: %)



참조: 세로축은 전 세계 GDP 대비 무역액(수출과 수입의 합)을 의미하여 단위는 %임.
 자료: World Bank'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tràs (2020)의 최근 연구에서도 이 시기의 무역발달이 GVC의 발전에 기인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GVC의 발전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로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해외 생산기지와의 정보전달 및 소통이 용이해진 것을 들 수 있다. 한 제품의 제조 공정을 여러 국가에서 나누어 진행하는 GVC의 특성상 생산기지 간의 통신비용은 중요한 생산비용 중 하나이다. 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이는 GVC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정보기술의 경우,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년마다 2배로 향상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정보저장 기술은 7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해외 생산기지에 제조 공정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을 크게 감소시켜 왔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 설계를 가능하게 한 CAD/CAM의 확산도 설계와 제조 공정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Fort (2017)는 CAD/CAM의 확산이 미국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여 생산하는 오프쇼어링을 촉진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의 보급을 예로 들 수 있다. 90년대 이후 인터넷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통신기술도 급속히 발전했다. 이 역시도 국가 간 원활한 소통에 기여했다.

둘째로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무역비용이 낮아진 점을 들 수 있다. WTO의 전신인 GATT는 주로 선진국 간 제조업 분야의 무역관세를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1995년 GATT는 WTO로 재출범하면서 상품관세 자유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추진하여 서비스 무역의 자유도 보장하게 된다. 동시에 회원국들 간의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어 양자 간 FTA 체결이 활발해졌다. 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은 2000년대 이후 세계 무역 상승세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로 냉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 국가의 확대와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경제 참여로 교역이 확대된 점을 꼽는다. 1990년대 초반에 공산권 국가들이 자유화되면서 동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의 개방이 시작되었다. 이들의 저렴한 노동의 대량 공급은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기 충분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교역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본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무역 증가세는 장기간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그림 1>을 보면 2008년 직후 전 세계 무역은 급격히 감소한 후,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시작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O'Sullivan, 2019) 한 반면, Antràs (2020)는 이를 점진적 세계화(Slowbalisation)로 정의하기도 한다. Antràs (2020)는 세계 무역 증가세, 다국적 기업의 활동 등의 지표의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2000년대 수준 이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Antràs (2020)에서 언급한 대로 경제지표 상으로의 세계화 정도는 10년전 수준을 능

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세계화 움직임도 더욱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2016년 브렉시트, 2017년 미국의 TPP탈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시작 등과 같이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이 반세계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선진국들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를 겪었다는 정치적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ichengreen, 2018).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컨대, 본 고는, 글로벌 무역 성장의 한계의 장기적 지속 그리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탈세계화 움직임은 코로나19 이후의 현재에도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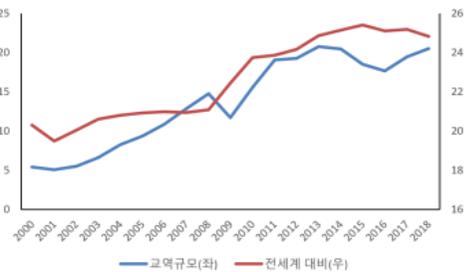
2. 동아시아 통상환경과 글로벌 밸류 체인

동아시아)는 오늘날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GVC는 유럽, 북미지역과 함께 3대 제조업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Li et al., 2019). 동아시아 제조업은 60년대 일본의 전후 경제에서 회복되면서 부상하기 시작(Subramaniam and Ng, 2014)하면서, 70년대에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수출주도 정책을 펼치며 본격적인 수출주도 성장을 이뤄나갔다. 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Factory Asia”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Factory Asia”는 동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연결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일컫는 말로 부품 생산과 조립, 선진국으로의 최종재 수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Ando and Kimura, 2007).

<그림 2> 동아시아 제조업
교역규모 2000-2018



<그림 3> 동아시아 중간재
교역규모 2000-2018



참조 : 교역규모는 수출과 수입의 합을 의미. 교역규모(좌, 파란선)는 10억달러, 전세계 대비(우, 빨간선)은 전세계 교역규모 대비 동아시아 교역규모(%)를 의미.

자료: The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최근 세계 무역의 발달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림 2>, <그림 3>을 보면, 2018년 기준 동아시아 제조업 규모는 전체 제조업 교역의 31.1%, 중간

1) 본 연구에서 동아시아는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재 교역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각각 23.8%, 20.3%에 비해 꾸준히 성장한 결과이다.

위 그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성장해 온 “Factory Asia”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품조달부터 조립생산까지의 공정과 소비의 과정이 모두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Li et al. (2019)는 아시아 단순 GVC와 복합 GVC²⁾ 각각의 전후방 산업이 아시아, 유럽, 북미 중 어느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아시아의 단순 전방 GVC 참여³⁾의 경우,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아시아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2000년 42%에서 2017년 45.5%로 증가했다. 동기간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유럽과 북미에서 소비되는 경우는 40.5%에서 27.1%로 감소했다. 아시아의 단순 후방 GVC 참여⁴⁾도 2000년 41.1%에서 2017년 48.5%로 증가하였고 이는 아시아 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복합 GVC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서도 아시아 내에서 생산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아시아는 이들 무역의 80~90%를 차지하여 이러한 흐름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시아 지역 GVC 무역의 발전은 이들 국가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Miroudot (2019)는 아시아 국가들이 GVC로 인해 중간재와 최종재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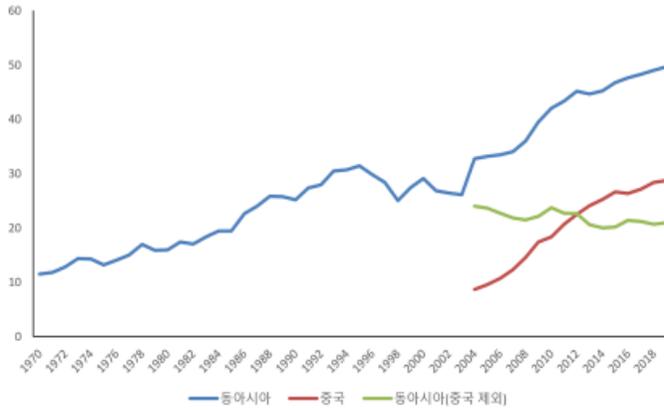
둘째, 동아시아 공급망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림 4>를 보면 동아시아의 부가가치 비중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가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1.5%에서 2019년 49.6%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이 지역의 부가가치는 급성장하는데, 동시에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전 세계 비중은 2004년 8.7%에서 2019년 28.7%로 크게 성장한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대외개방과 큰 연관을 갖는다 (Baldwin and Lopez-Gonzalez, 2015). 중국은 2001년 WTO가 가입하면서 세계 무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고 전 세계 FDI가 빠르게 유입되었다. 동 기간 중국 이외의 동아시아의 부가가치는 24%에서 20.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다른 동아시아 다른 지역의 부가가치를 흡수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단순 GVC는 생산과정 중 국경을 1회, 복합 GVC는 국경을 2회 이상 통과하는 GVC 생산 과정을 의미함.

3) 전방 GVC 참여란, 글로벌 공급망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생산과정(최종재로서의 생산단계)에 부품을 수출 공급하는 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단순 전방 GVC는 국경을 1회 통과하여 중간재 부품을 다른 국가의 최종 최종재 생산에 공급함으로써 GVC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4) 후방 GVC 참여란, 글로벌 공급망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생산과정(중간재 생산단계)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단순 후방 GVC 참여는 국경을 1회 통과하여 중간재 부품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함으로써 GVC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4> 동아시아 및 중국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1970-2019



참조: 중국 데이터(빨강)는 2004년 이후부터 집계. 단위는 %임.

자료: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중국의 WTO 가입은 대외 개방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중국은 WTO 가입 이전인 1980년부터 이미 미국이 부여하는 정상무역관계 (Normal Trade Relation) 를 부여받고 최혜국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정상무역관계 (Temporary NTR)로 매년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WTO 가입으로 중국은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 (Permanent NTR)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중국은 본격적으로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Yu, 2020).

셋째, 동아시아 GVC 체제는 2010년대 이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다. 가장 주요한 특징은 동아시아 GVC 무역 성장세 감소와 동남아(South-East Asia)의 지역 내 역할의 변화이다. Miroudot (2020)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수입 중 중간재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 무역 성장세 감소와 같은 맥락이다. <그림 1>에서도 201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교역규모 증가세가 주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동아시아의 부가가치 비중도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으로 각국의 GVC 구조 변화와 최종재 수입비중 증가를 들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생산기술 향상에 따라 수입산 중간재 사용 비중이 줄어들어 후방 GVC 참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최종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간재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양국은 동아시아 GVC에서 점점 전방산업 참여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술진보로 자국산 중

간재 비중이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의 자국 부가가치 상승세가 가파르다 (Kee and Tang, 2016; Duan et al., 2018).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으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로 최종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간재 수입비중이 줄어든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GVC 무역의 성장세를 감소시킨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동아시아 GVC 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후방 GVC 참여가 증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가 중국을 대체하여 최종재 조립과 수출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저임금 활용을 위한 산업이 동남아시아로 유입되는 효과를 낳았다. Lund et al. (2019)에 따르면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수출 점유율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5.1%에서 52%로 하락했지만, 베트남은 동기간 4.8%에서 7%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GVC는 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해왔으며 최근 10년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GVC의 중심으로 떠오른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 중국과 관련된 국제 현안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역할과 다른 국가들의 관계 설정이 동아시아 GVC의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Ⅲ. 코로나19 및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양상

1. 코로나19와 글로벌 밸류 체인

1) 최근 동향: 코로나19와 글로벌 밸류 체인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글로벌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엔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했지만, 2021년부터 점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 급증,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코로나19 최초 발생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무역에 미친 영향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세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 시기는 2000년 초반부터 중반기까지이다. 코로나19 발생초기의 특징은 의료 공급망 충격과 봉쇄조치로 인한 생산차질이 나타났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는 전 세계 경제의 마비 상태라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난 의료 장비의 공급망 붕괴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예상치 못한 정도로 급속히 퍼지며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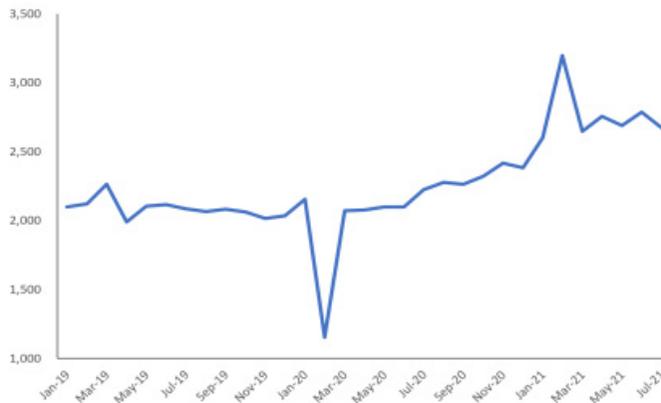
급증하자 세계 각국은 일회용 보호장비,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의료 장비에 대한 수출금지를 시행했다. 그중에서 전 세계 의료품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의 수출금지가 전 세계 공급망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된 중국은 즉각 의료장비에 대한 수출금지를 단행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의료 장비 공급의 43%를 차지했고 특히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공급의 66%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Bown, 2021a).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동시에 전 세계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4월 이후에는 중국이 의료 장비 수출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렸지만 전 세계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소호흡기와 의료 장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자체 생산을 늘리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단기간에 급격한 생산 확충은 제한적이었다⁵⁾.

또한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 각국은 강력한 봉쇄로 대응했고 이는 전 세계 무역의 수요와 공급에 모두 큰 충격을 주었다. 봉쇄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생산시설 인원 제한이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식으로 시행되었다. 봉쇄 조치는 국제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Hayakawa and Mukunoki (2021)는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각국의 수출입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가장 엄격한 봉쇄 조치가 시행된 중국의 경우 봉쇄된 지역의 수출이 전년대비 34%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다 (Pei et al, 2021).

두 번째 시기는, 2020년 하반기이다. 이 시기부터는 중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로 총수요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그 이전에 발생했던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공급비용 상승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선진국들도 1차 대유행이 지나면서 완화된 봉쇄 조치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억눌린 수요가 급격히 회복세를 보이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산과 운송비용의 상승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공급 여력이 충분해졌고 이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수요 급증과 맞물려 중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중국의 수출 규모는 2020년 7월부터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그림 5> 참조).

5) The New York Times (2020. 3. 26) “There Aren’t Enough Ventilators to Cope With the Coronavirus” <https://www.nytimes.com/2020/03/18/business/coronavirus-ventilator-shortage.html> (검색일: 2021. 11. 9)

<그림 5> 중국 월별 수출액 규모 추이 2019.1-2021.7



참조: 계절조정된 값으로 단위는 억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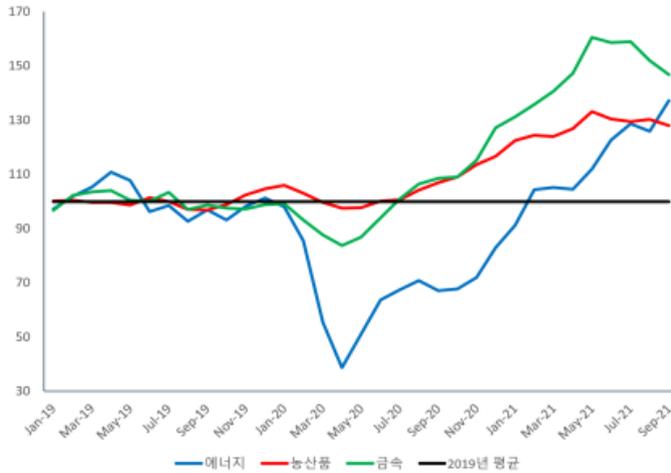
자료: FRED

세 번째 시기는 2021년 상반기이후의 시기이다. 이 때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재화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반면에 재화 소비를 늘리면서 제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Remes et al. (2021)에 따르면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민간 소비는 2020년 전년대비 11~26% 하락하였다. 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동안 1~6%의 소비감소를 보인 것에 비하면 매우 큰 감소 폭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저축은 오히려 10~60% 증가하면서 이른바 보복소비 (Pent-up demand)가 나타나기 충분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는 팬데믹 기간의 소비감소가 일반적인 경기불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기불황은 자산거품의 붕괴, 부채의 증가, 혹은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기인하기 때문에 저축여력이 크지 않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소비 기회를 미뤄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봉쇄 조치가 취해지면서 공급난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원자재 가격 상승, 소재부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된다. <그림 6>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직후 급락했던 에너지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하여 2021년 초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1년 3분기부터는 천연가스와 석탄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다른 분야로 전파되어 전반적인 생산 비용 상승을 견인한다. 먼저 석탄 가격 상승은 중국의 전력난으로 이어져서 중국의 제조업 공정에 타격을 주었다. 중국의 일부 지역은 전력공급 제한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공급난에 시달리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⁶⁾. 특히 북미에서 재화 수요가 급증하는 2021년 말에는 더 큰 타격으

로 작용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비료 가격에도 영향을 주어 농산물 가격 상승 또한 견인했다. 농산물 가격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생산비용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림 6> 주요 원자재 월별 가격 지수 추이 2019.1-2019.9



참조: 각 원자재 지수는 2019년 평균값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자료: World Bank data

또한 동남아시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져 전 세계 차량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장 근무 인원을 60%로 제한하면서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초래했다.⁷⁾ 또한 많은 외국기업이 생산기지로 두고 있는 베트남에서 올해 7월부터 두 달가량 봉쇄 조치가 다시 시행되면서 각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⁸⁾. 미국과 유럽에서는 운송난으로 재화 공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품수요 증가로 아시아에서 북미와 유럽을 오가는 화물선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⁹⁾.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트럭 운전기사의 퇴직과

6) The New York Times (2021. 9. 27) “Power Outages Hit China, Threatening the Economy and Christmas” <https://www.nytimes.com/2021/09/27/business/economy/china-electricity.html> (검색일: 2021. 11. 9)
 7) Fortune (2021. 8. 24) “This Southeast Asian country’s COVID surge may worsen the car chip shortage” <https://fortune.com/2021/08/24/malaysia-covid-surge-car-chip-shortage/> (검색일: 2021. 11. 9)
 8) The Wall Street Journal (2021. 9. 30) “Covid-19 Factory Closures Prompt Some U.S. Businesses to Rethink Vietnam” <https://www.wsj.com/articles/covid-19-factory-closures-prompt-some-u-s-businesses-to-rethinkvietnam-11633014618> (검색일: 2021. 11. 9)
 9) SCMP (2021. 10. 5) “China shipping: container shortages leave exporters struggling to meet overseas orders ahead of Christmas shopping rush” <https://www.scmp.com/economy/global-economy/article/3151133/china-shipping-container-shortages-leave-exporters> (검색일: 2021. 11. 9)

재화 수요급증으로 부족 인원이 8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운송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¹⁰⁾. 영국에서도 코로나19 당시 퇴직한 유럽 이민자 출신의 운전기사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복직하지 못하면서 물류 이동이 어려워져 주유 대란과 생필품 대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¹¹⁾.

이처럼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에 충격을 일으키며 글로벌 무역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각국이 봉쇄 완화 기조를 보이면서 점차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치료제 개발 등의 변수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여부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 향후 전망: 코로나19와 글로벌 밸류 체인

2020년부터 약 2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액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 (<그림 7> 참조). WTO (2021)는 당초에도 무역 규모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보다 낮은 교역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백신접종 효과로 인해 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WTO (2021)는 2021년 3월에 내놓은 세계 무역액 전망치를 10월에 상향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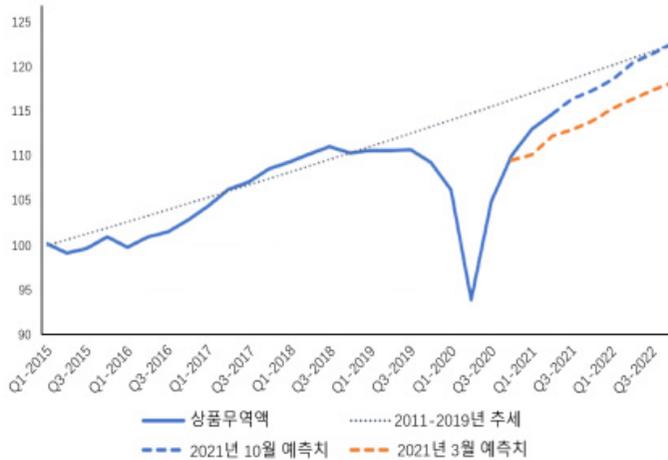
그럼에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향후 전 세계 무역이 정상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재봉쇄를 막기 위해 백신 보급률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개발도상국의 백신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개발도상국에 의존하는 만큼 이들 국가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원자재를 생산하는 아프리카와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 개발도상국의 봉쇄 조치가 전 세계 공급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예기치 못한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처하도록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하거나 수입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 봉쇄조치로 인한 생산차질 및 수출제한이 발생할지 예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의 국내외 조달계획을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10) CNN (2021. 10. 19) “Wanted: 80,000 truck drivers to help fix the supply chain” <https://edition.cnn.com/2021/10/19/economy/trucking-short-drivers/index.html> (검색일: 2021. 11. 10)

11) CNBC (2021. 10. 1) “After Brexit, thousands of foreign truckers went home. Now, Britain wants them back” <https://www.nbcnews.com/news/world/after-brexith-thousands-foreign-truckers-went-home-now-britain-wants-n1280451> (검색일: 2021. 11. 20)

<그림 7> 세계 상품 무역지수 분기별 추이 및 전망
2015년 1분기-2022년 4분기



참조: 상품무역액(파랑)은 2015년도 값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 세계 상품 무역지수를 의미함. 2011-2019년 추세(점선)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무역액 변화를 반영한 추세임. WTO는 2021년 3월의 세계 무역 예측치(주황 점선)를 2021년 10월에 수정(파랑 점선)하여 공표함.

자료: WTO (2021)

다음으로는, 선진국과 일부 국가들의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재화시장의 수요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정상화가 중요하다. <그림 8>을 보면 미국의 재화 소비액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19년 수준을 넘어서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동시에 전체 소비에서 재화 소비의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서비스 수요를 줄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백신 접종률 향상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서비스 수요도 정상화되고 재화 수요도 안정되어 공급 부족 사태가 호전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방역완화 이후 다시 중증환자 급증으로 방역조치 강화로 돌아서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¹²⁾. 그림에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 각국에서 효과적인 코로나19 관리 대책을 갖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2) FORTUNE (2021. 11. 8) “Denmark ditched its COVID rules 2 months ago. Now cases are up—and restrictions are coming back” <https://fortune.com/2021/11/08/denmark-reintroduce-covid-restrictions-masks-health-passes/> (검색일: 2021. 11. 20)

<그림 8> 미국 월별 재화 소비금액 추이 및 소비 비중
2019.10-2021.9



참조: 재화소비(좌)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액의 합을 의미하며 단위는 10 억달러임. 재화소비 비중(우)은 서비스와 재화소비의 합에서 재화소비의 비중(%)을 의미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3) 글로벌 밸류 체인 회복에 관한 연구와 전망

앞서 언급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부족 및 물류 운송 지연 사태는 수요회복에 비해 공급망이 회복(Supply chain resilience)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현재의 공급망 구조는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공급충격에 매우 취약한 요소를 지닌다. 현재의 GVC 체제는 전 세계 각지에서 소재, 부품, 조립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협업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 발달된 운송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생산과 공급(Just-in-time Inventory) 체제를 갖추었다. 따라서 어느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 차질 혹은 운송망의 마비는 즉각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 이는 생산비용이 상승하거나 최종재 생산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영향이 재화를 소비하는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반복적인 봉쇄조치는 공급충격으로 이어져 전 세계 GVC 생산 체제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과거 오일 쇼크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다. 원유는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방산업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유가격의 급등은 전 세계 제조업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는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GVC 공급망을 통해 그 충격이 전파되면서 다각적으로 비용 상승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늘날의 GVC 공급망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국 내 생산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급경로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Javorcik, 2020). 그동안의 공급망이 비용 최적화를 바

탕으로 구축되었다면 앞으로 빈번하게 다가올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Boehm et al., 2019)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충격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18년부터 지속된 미중 무역분쟁, 전염병의 확산, 기후변화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공급망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정책적으로 공급망의 다양화와 국가안보 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과 공급망 다양화를 지원해왔다 (Evenett and Fritz, 2021).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존 GVC 공급망이 재구축될지는 반론도 존재한다. Antràs (2020)는 글로벌 공급망의 경직성(Stickness)으로 인해 단기 충격에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전망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식되거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안착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기 충격으로 인식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국 중심 공급망 역시 글로벌 충격에 대처하기 어렵고 오히려 효용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onadio et al. (2021)는 팬데믹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갖추더라도 자국에서도 봉쇄 조치가 시행된다면 공급충격이 상당한 것을 보였다. Eppinger et al. (2021)는 외부 충격을 막기 위해 GVC에서 이탈할 때의 비용증가가 기존 GVC 체제하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효용 감소 효과보다 더 큰 것을 보였다. 현재 GVC 체제는 각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생산자의 비용 최소화와 각국의 효용 극대화를 이룬 최적의 생산 체제에 가깝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에 외부 충격에 회복력을 지닌 GVC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Antràs (2020)의 견해와 달리 백신접종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19를 점점 장기 충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GVC 생산체계가 갖는 경직성(Antràs, 2020)과 완전한 자국 중심 공급망의 한계 (Bonadio et al., 2021; Eppinger et al., 2021)로 인해, 향후 외부 충격에 회복력(resilient)을 지닌 형태의 ‘수정된 GVC’ 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수정된 GVC 체제의 모습은, 국민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수입구조 다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일부 자국민 안전과 직결되거나 핵심적인 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자국 생산 중심의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Baldwin and Freeman, 2021).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난 의료 장비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에서 보았듯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산업에 대해서는 각국이 정책적으로 국내 생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공급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반도체도 각국에서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또한 각국의 기술 확보 노력과 자국 생산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국 내 반도체 시설 유치를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것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이다¹³⁾.

또한 공급충격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자국 산업에 핵심적인 원자재나 부품, 소재의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GVC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의 중국산 요소수 부족 사태¹⁴⁾는 특정 국가에 의존한 공급망 리스크가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갖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국지적인 봉쇄 조치가 반복되면서 어느 국가에서 생산 차질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국에서 원자재 및 부품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이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수출제한 조치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국가로부터 오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공급망 확보 노력과 수입구조 다변화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GVC 공급망 체계가 해외 아웃소싱과 즉각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생산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공급충격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이와 같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GVC 공급망은 재개편보다는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다. 외부 충격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 안보에 중요한 의료 장비나 핵심기술 산업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원자재, 소재, 부품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로 특정 국가로부터의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GVC 체계는 지속하는 코로나19 확산과 향후 예측 불가능한 공급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밸류 체인

1) 최근 동향: 미중 무역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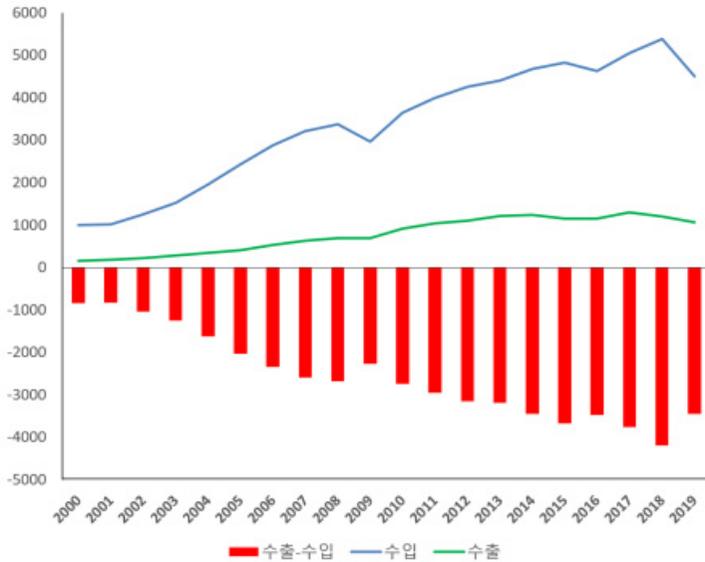
2020년 7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시각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¹⁵⁾. 미국의 1970년대 중국과의 수교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은 중국의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끌어내기 위한 포용주의 정책(Engagement policy)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주의는 더욱 공고해졌고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상대로 성장했다는 것이 최근 미국의 시각이다. 이 연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된 트럼프 정부의 태도이지만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13) Voice Of America (2021. 11. 2) "Taiwan Chip Giant to Expand to Japan" <https://www.voanews.com/a/taiwan-chip-giant-to-expand-to-japan/6296494.html> (검색일: 2021. 11. 20)

14) 연합뉴스 (2021. 11. 10) "요소수사태, 경기회복 가로막나...장기화 땀 경제전반 타격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9151500002> (검색일: 2021. 11. 20)

15) U.S. Department of State(2020. 7. 23),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https://2017-2021.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2/index.html> (검색일: 2021. 11. 25)

<그림 9> 미국 대중국 무역액 추이 2001-2020



참조: 단위는 억달러임.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그림 9>를 보면 미국의 대중 수입은 중국의 2001년 WTO 가입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대중 수입은 연평균 13%, 수출은 10%의 성장률을 보여 수입의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2000년 19% 수준에서 2018년 전체 무역적자의 48%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렇게 지속적인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리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당선 직후 대중국 무역 압박을 전개한다 (Eichengreen, 2018).

양국의 무역분쟁은 4가지 쟁점의 견해차에서 비롯된다 (Qiu et al., 2019). 첫째,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가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자국산 수출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중 적자는 저축률이 낮은 미국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반박한다. 또한 노동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가 있는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당연하다는 태도이다.

둘째로 미국은 중국이 외국 진출 기업에 대해 합작회사를 강요하여 중국에 기술을 강제로 넘겨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까지 주요 업종의 외국기업은 중국 법인에서 50% 이상 지분을 획득할 수 없었다¹⁶⁾. 반면에 중국은 외국기업의 기술이

16) KPMG (2017. 8. 23) “China to boost foreign direct investment - Limits on foreign equity stakes in Chinese enterprises to be lifted” <https://home.kpmg/cn/en/home/insights/2017/08/china-tax-alert-23.html>

전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이윤추구 행위의 일환이라 주장한다.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영업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항시 기술 유출 위협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점점 노력하고 있으며 더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로 미국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기업의 인수를 돕고 관련 기술을 탈취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WTO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보조금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쟁점 차이는 결국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기술이전 강제 요구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¹⁷⁾. 또 2018년 3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을 포함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한다¹⁸⁾. 미국은 이 행정명령으로 IT, 의료 및 바이오, 항공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법 행위와 불공정 경쟁의 시정을 요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각국 법원에 제소하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의 무역분쟁이 시작된다.

미국은 2018년 7월 1차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도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미국은 2019년 9월까지 4차례 10~25%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중국도 상응하는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이 진행되었다.

상호 관세 부과로 갈등하던 양국은 2019년 12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¹⁹⁾.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향후 매년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하고, 향후 2년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입을 2017년의 2,00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검색일: 2021. 11. 25)

- 17) USTR (2017. 8. 24)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Hearing; and Request for Public Comments: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FRN%20China301.pdf> (검색일: 2021. 11. 25)
- 18) The White House (2018. 3. 22)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Signing of a Presidential 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presidential-memorandum-targeting-chinas-economic-aggression/> (검색일: 2021. 11. 25)
- 19) USTR (2020. 1. 15)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ext" <https://ustr.gov/countries-regions/china-mongolia-taiwan/peoples-republic-china/phase-one-trade-agreement/text> (검색일: 2021. 11. 25)

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2년간 지속한 관세보복의 확전을 잠정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확대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받았으며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각자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PIIE에 따르면²⁰⁾ 최근 중국의 미국제품 수입액은 합의 당시의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2년간 총 3,800억 달러 규모를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1년 9월 현재 중국은 총 3,190억 달러 규모를 수입하여 목표치의 62%만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중 농산품 수입은 목표의 76%를 달성하여 비교적 높은 달성률을 보였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49%로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기록적인 저유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1단계 합의 목표 도달에 실패한 원인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들 수 있겠지만 Bown (2021b)은 코로나19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된 수입 목표로 인해 양국이 또다시 무역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미중 양국은 기술 분쟁으로 시작하여 상호 관세부과로 이어진 무역분쟁은 1단계 합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이며 신냉전 시대를 우려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2) 미중 무역분쟁에 관한 최근 연구

미중 간 무역 분쟁은 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관련 연구는 주로 양국의 쟁점이 되는 분야에서 실증적인 근거를 찾는 데 주력한다. 쟁점이 되는 주제들은 중국의 기술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미중 무역이 미국경제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양국의 관세전쟁의 영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된 양국의 기술 수준에 관한 최신 연구는 중국의 빠른 기술 진보에 주목하며 미국과의 차이를 얼마나 좁혀왔는지에 관심을 둔다. Wei et al. (2017)는 중국 기술 진보를 양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중국의 GDP대비 R&D 투자 비중은 1991년 0.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서서 2014년엔 2.05%를 기록하였다. 전 세계 R&D 투자 대비 미국의 비중은 2000년 36.4%에서 2017년 25.6%로 하락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4.5%에서 23.3%로 급증했다. 또한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9%의 성장률을 기록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중국이 1978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에서 집계하는 지식재산권 출원량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WIPO, 2019). Fang et al. (2021)

20) PIIE (2021. 11. 24) "US-China phase one tracker: China's purchases of US goods" <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us-china-phase-one-tracker-chinas-purchases-us-goods> (검색일: 2021. 11. 25)

은 중국 기술 수준의 질적 진보를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특허품질이 중국의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16.72%에서 7.34%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이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지식이전이 나타나는 반면에 전기공학 등 특정 분야에서는 2001년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지식이전이 나타나기도 한다. Han et al. (2020)도 중국의 기술 발전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Fang et al. (2021)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술의존도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즉,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아졌지만, 그 이후 최근 10년간은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미중 무역이 실제로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Autor et al. (2013)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미국의 실업이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전체 실업의 25%가 중국산 수입 대체로 인한 산업침체에 기인한 것이라 밝혔다. 특히 저숙련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타격이 컸으며 가구, 의류, 섬유 등이 밀집한 남부 대서양 지역과 조립 제조업에 특화된 중서부 지역에 대한 영향이 컸다. Acemoglu et al. (2016)은 더 나아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비제조업까지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에 Autor et al. (2013)에서 예측한 것보다 일자리 손실은 3배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한 서비스업의 동반 침체까지 고려한 결과이다. Autor et al. (2021)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상황까지 확장해서 보아도 중국 수입대체 효과로 인한 실업 증가가 여전한 것을 밝혔다. 또한 수입대체로 인해 쇠락한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술한 내용들은 대중무역의 미국 내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만 주목한 연구들이다. 반면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이익은 소비자 효용 증대와 서비스업의 성장에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저렴한 물품들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제조업 물가지수를 7.6% 하락시켜 미국 소비자 효용 증가에 기여했다 (Amiti et al., 2019). 또한 미국은 중국산 수입대체로 인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동서부 해안지역의 고숙련 노동자의 이익이 증가했다 (Bloom et al., 2019). 노동시장에서도 미국의 수출 증가 효과까지 고려하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Feenstra and Sasahara (2018)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수출로 인한 고용 증가는 660만 명이고 대부분이 서비스 관련 수출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다.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으로 200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은 무역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한 것이다. Wang et al. (2018)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하는 후방산업에서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역시 중국과의 무역은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중 무역은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산 수입품은 수입대체를 유발하여 미국의 저숙련 노동자의 효용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저렴한 소비재는 미국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켰으며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양국의 무역전쟁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최근 많은 학자가 주목하는 주제이다. 연구들은 주로 양국의 관세부과가 양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양국의 상호 관세부과가 미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여 미국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거나 (Fajgelbaum and Khandelwal, 2021) 수입제품의 종류가 줄어들어 효용이 감소하는 효과 (Amiti et al., 2019)가 나타났다. Benguria and Saffie (2019)에 따르면 미국의 생산자는 양국의 관세부과로부터 모두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는 중국산 중간재 가격을 상승시켜 중간재 수입 규모를 감소시켰고 동시에 중국의 수입 관세 부과는 미국 수출기업의 수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양국의 관세부과는 중국경제에도 부정적이었는데 주로 생산자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Chor and Li (2021)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는 중국의 보복관세보다 중국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었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지역은 중국 전체의 30%에 해당하는데, 2017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이들 지역의 1인당 GDP가 2.52% 하락하고 고용률은 1.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의 관세부과는 중국 수출기업의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R&D 지출, 영업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enguria et al., 2020). 이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중국경제에 대한 타격이 작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첫째, 중국은 지난 10년간 기술수준이 급성장하였지만, 아직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대중무역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실제로 드러났지만,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 존재해왔다. 마지막으로 상호 관세부과는 양국의 모든 경제 주체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국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전망: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밸류 체인

가. 미중간의 탈동조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발표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²¹⁾. 연설을 통해 본 향후 미중 관

계는 급격한 악화는 피하겠지만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중국에 1단계 합의를 준수하여 수입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고율 관세에 대해 일부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시사하는 정도에 그쳤다.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양국은 각자의 경제구조에서 서로의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써 양국의 탈동조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첫째로 기술적 탈동조화로 나타난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국도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둘째로는 양국 각자의 동맹 강화이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이후 유럽, 일본과 한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일대일로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동맹국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복수국간 무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 각자의 탈동조화 노력은 장기적으로 GVC 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은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신형인프라” 정책과 반도체 기술 확보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형인프라는 5G, 산업 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7대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²¹⁾. 투자 금액은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800조원)에 달하며 민간과 관련 투자까지 총 28조 위안(약 5,0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분야는 신형인프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산업의 핵심적인 부품인 만큼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Bown, 2020). 특히 미국의 반도체 수입 제재는 중국이 반도체 자립도를 단기간에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중국의 내수경제 활성화로 수출의존도를 줄이려는 계획은 “쌍순환” 정책이다. 쌍순환은 내수시장을 일컫는 내 순환, 수출시장을 의미하는 외 순환을 통칭하는 것이다. Lin (2021)은 쌍순환 정책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출에

21) USTR (2021. 10. 4) “Remarks As Prepared for Delivery of Ambassador Katherine Tai Outlining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New Approach to the U.S.-China Trade Relationship”<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1/october/remarks-prepared-delivery-ambassador-katherine-tai-outlining-biden-harris-administrations-new> (검색일: 2021. 11. 27)

22) SCMP (2020. 5. 20) “China has new US\$1.4 trillion plan to seize the world’s tech crown from the US” <https://www.scmp.com/tech/policy/article/3085362/china-has-new-us14-trillion-plan-seize-worlds-tech-crown-us> (검색일: 2021. 11. 27)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2006년 35.4%에서 2019년 17.4%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미 내수경제의 비중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99달러에서 10,098달러로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내수시장이 커진 결과이다. 하지만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2019년 기준 39%로 미국(68%), 일본(55%)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은 내수시장이 확대 가능성이 아직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진국 대비 낮은 서비스업 비중, 도시화율을 고려하면²³⁾ 소비수준이 향상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간 이동을 제한하는 호구제도, 도시 주거비용 등의 현안을 개혁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 관련 정책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확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내수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이 폐쇄경제로의 이행이 아니며 개방경제를 지속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우군 확보를 통한 지역패권 강화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수입 확대를 위한 박람회 개최 등으로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인다. 동시에 주변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일대일로”를 통해 우군 확보에 주력한다. 더불어 RCEP과 CPTPP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 참가에도 적극적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2020년 11월 타결되었다. 이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무역협정으로 세계 최대 다자간 FTA로서의 의의가 있다.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협정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신들은 RCEP을 통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평가한다²⁴⁾.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CPTPP에도 가입을 신청했다. CPTPP는 2021년 9월 미국이 탈퇴한 TPP의 개정안으로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중국은 노동·환경 분야, 국영 기업 보조금, 시장 개방성, 디지털 무역 등에서 RCEP에 비해 높은 개방도를 요구하는 CPTPP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중국의 가입 시도는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이다²⁵⁾. 하지만 중국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국유기업 보조금, 노동권 보장,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조건 등으로 인해 가입 절차가 오랜 협상이 예상되며 실제로 가입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가입 시도는 대외협력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²⁶⁾.

23) 2017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7.9%로 일본(91.5%), 미국(82%), EU(76.7%)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Our World in Data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또한 2018년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3.2%로 미국(76.8%), 일본(69.3%), EU(6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World Bank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24) Economist (2020. 11. 21) “Who gains from RCEP, Asia’s new trade pact?”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0/11/19/who-gains-from-rcep-asias-new-trade-pact> (검색일: 2021. 11. 27)

25) THE DIPLOMAT (2020. 12. 1) “With RCEP Complete, China Eyes CPTPP” <https://thediplomat.com/2020/12/with-rcep-complete-china-eyes-cptpp/> (검색일: 2021. 11. 27)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에 미국도 동맹을 강조하며 대외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CPTPP에 재가입은 아직 고려하지 않지만,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들과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성 의지를 보인다²⁷⁾. 특히 기술 분야 협력을 중시하는데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대만,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2020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은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을 위해 최소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하고 있다²⁸⁾. 이는 자국의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자국의 반도체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 유럽과의 기술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10월 유럽연합(EU)과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시켰다. 비록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 위원회는 비시장 국가와의 무역 대응, 첨단기술의 인권침해 방지, 수출규제 등의 합의사항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다²⁹⁾.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 바이든 정부는 G7 국가들과 2021년 6월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계획을 발표했다³⁰⁾. 이는 동맹국들과 발족한 개발도상국에 인프라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여 빚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중국의 부당한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비판해왔다. B3W를 통해 미국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각국의 자립 행보가 즉각적인 양국 간의 경제협력 약화로 이어질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 개방 정도가 커지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금융서비스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 방향의 무역 흐름이 양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

26) Economist (2021. 9. 25) “China throws a wrench into a transpacific trade pact”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1/09/20/china-throws-a-wrench-into-a-transpacific-trade-pact> (검색일: 2021. 12. 1)

27) Reuters (2020. 11. 17) “Biden says U.S., allies need to set global trade rules to counter China's influence”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biden-idINKBN27X00U> (검색일: 2021.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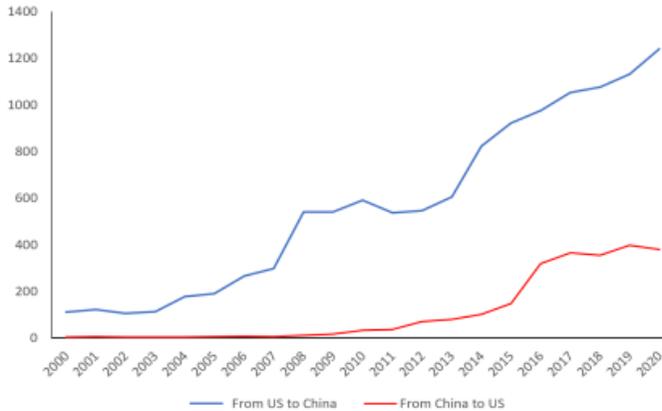
28) Reuter (2021. 10. 22) “U.S. lawmakers urge speedy action on U.S semiconductor chip funding” <https://www.reuters.com/business/us-lawmakers-urge-speedy-action-us-semiconductor-chips-funding-2021-10-21/> (검색일: 2021. 12. 1)

29) PIIE (2021. 9. 24) “What is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Five things you need to know” <https://www.piie.com/blogs/trade-and-investment-policy-watch/what-us-eu-trade-and-technology-council-five-things-you-need> (검색일: 2021. 12. 1)

30) Voice of America (2021. 11. 4) “‘Build Back Better World’: Biden's Counter to China's Belt and Road” <https://www.voanews.com/a/build-back-better-world-biden-s-counter-to-china-s-belt-and-road/6299568.html> (검색일: 2021. 12. 1)

다. 1단계 합의를 통해 약속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조건으로 외국기업의 단독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는데 실제로 미국의 금융사인 JP Morgan과 골드만 삭스는 최근 단독 법인 운영을 허가받았다³¹⁾. 특히 미국의 대중투자액은 2020년에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림 10> 참조). 이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단기간에 통제하여 주요국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을 기록한 덕분이다. 또한 중국의 쌍순환 정책으로 소비시장이 확대 되면 미국산 최종재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에서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미국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중국경제가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만큼 미국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림 10> 미국과 중국의 상호 해외직접투자(FDI) 추이
2000-2020



참조: 단위는 백만달러임.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나. 미중 간의 탈동조화와 글로벌 밸류 체인 전망

이와 같은 미중 간의 탈동조화는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전 세계 공급망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중 양국이 각자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는 GVC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첨단기술 산업은 모든 제품의 핵심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곧 전방 GVC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국의 기술 탈동조화는 기존 GVC 체제의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극단적으로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한다면 양국은 기술 표준이 서로 다른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미국 기술에 기반한 GVC 체제와 다른 새로운 GVC 체제

31) Financial Times (2021. 10. 18) “Goldman Sachs granted full ownership of China securities venture” <https://www.ft.com/content/3c74fac6-65fa-4af1-a4a7-211eefac1923> (검색일: 2021. 12. 1)

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로운 통상환경은 기존의 효율성 의미를 재고하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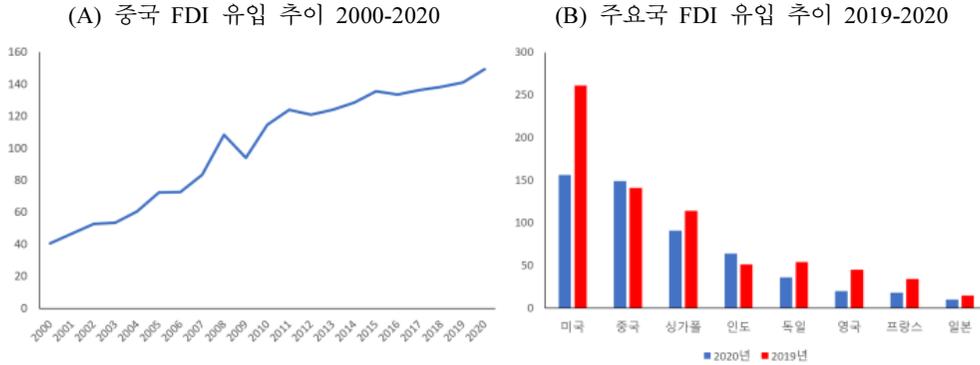
하지만 양극화된 체제에서도 양국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이를 ‘GVC의 개방형 양분화’로 정의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 중에도 화웨이와 같이 중국 정부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는 특정 기업을 제외하고 양국 민간기업의 교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즉,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무역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3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이처럼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는 한 양국의 GVC 체제에 모두 속하여 기업 활동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 생산설비를 갖춘 삼성전자, TSMC와 같은 기업들이 그 예이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국 중심의 GVC 체제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의 쌍순환 정책으로 중국의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이 개방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기업들과 같이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 스위스의 UBS도 최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법인에 대해 과반수 주식 보유를 승인받았다³²⁾. 중국으로의 FDI 유입은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인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그림 11> (A) 참조) 2020년 코로나19 기간에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그림 11> (B) 참조).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갈등으로 인해 기존 GVC 체제에서의 효율의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GVC로 재편될 것이다. 현재 미중간의 관계가 신냉전이라 불리지만 과거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과 다른 점은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미중 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매우 상호 의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밸류 체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국의 갈등이 초래한 향후 GVC의 형태는 양극화되어 있지만 서로의 교류가 가능한 개방형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2) Reuters (2020. 1. 16) “Factbox: Foreign investment banks with majority stakes in China units”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finance-factbox-idUSKBN1ZF0K8?taid=5e2053e62f317700010a8d8f&utm_campaign=trueAnthem:+Trending+Content&utm_medium=trueAnthem&utm_source=twitter (검색일: 2021. 12. 5)

<그림 11> 중국과 주요국 FDI 추이



참조: 단위는 억달러임.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

3. 코로나19 및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동아시아 글로벌 밸류 체인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동아시아 통상환경은 큰 변화를 마주했다. 아시아 지역은 북미와 유럽지역에 비해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잘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³⁾. 하지만 백신 개발이 본격화되고 나서는 주요 백신 개발 국가인 북미와 유럽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어지며 변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미중 간 상호 보복관세 부여가 시작된 이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GVC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Factory Asia”가 향후 외부 충격에도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의존도 재고와 주도적인 국제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아시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의 일부 품목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수입구조 다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과 같은 특정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낮추어 공급 충격을 최소화하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도 중국 의존도를 재고하게 한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GVC도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에서 벗어나 동남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동남아로의 생산시설 이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Kimura, 2021a). 일본은 이전부터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왔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들의 정책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을 필두로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3) PIIE (2021. 3. 5) “Lessons from East Asia and Pacific on taming the pandemic”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issues-watch/lessons-east-asia-and-pacific-taming-pandemic> (검색일: 2021. 12. 5)

또한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도적으로 국제질서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 Choi (2020)는 현재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GVC가 겪는 통상환경을 ‘뉴노멀’로 정의하고 지역안보를 통상환경의 주요 요소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뉴노멀 상황에서 Kimura (2021b)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중급국가 (Middle power)들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무역 불확실성을 줄일 것을 당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구조 상 미중 무역분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제질서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동남아의 중국 역할을 대체는 중국과의 전후방 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곧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향후 동남아시아가 미중 무역분쟁의 종속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RCEP 타결 과정에서 아세안이 주도적인 역할을 보인 것처럼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GVC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GVC는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까지 글로벌 공급망을 책임지고 있기에 회복력을 갖춘 공급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을 더욱 다양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지난 40여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세계 무역은 최근 10년간의 구조변화에 이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봉쇄 조치로 인한 공급부족 사태에서 보복 소비로 인한 수요급증까지 글로벌 무역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소재, 부품 부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도 양국 간의 긴장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이는 양국의 경제적 탈동조화로 이어지면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정책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이 GVC에 주는 영향과 전망은 다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지에 관해 물었다면, 미중 무역분쟁은 양극화된 글로벌 통상환경에서의 공급망 재구축을 과제로 남겼다. 코로나19는 기존 GVC의 취약점인 국지적인 공급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찾게 한 반면, 미중 무역분쟁은 기존 GVC에서 효율성의 개념을 국제정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도록 재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수정된 GVC는 일부 품목에 대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급충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공급망의 수입 다변화로 특정 국가로

부터의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이에 더해 기존 GVC의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미중간 기술 탈동조화가 촉발한 양극화된 GVC는 양국의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한 생산체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양국은 물론 제3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한 민간 교류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의 민감한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는 한 양국 모두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한 “GVC의 개방형 양분화”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술한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더 정확한 국제무역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길 기대한다.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국제무역에 주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특히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글로벌 기업의 GVC 전략과 그 성과에 대한 효과도 고려해본다면 더 풍부한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cemoglu, D., D. Autor, D. Dorn, G. H. Hanson, and B. Price(2016), “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S1), S141-S198.
- Amador, J. and F. Di Mauro(2015),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VOX CEPR’s Policy Portal, <https://voxeu.org/article/age-global-value-chains>
- Amiti, M., S. J. Redding, and D. E. Weinstein(2019) “The impact of the 2018 tariffs on prices and welfa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4), 187-210.
- Ando, M. and F. Kimura(2007),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Networks in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7-216.
- Antràs, P.(2020), “De-Globalisation? Global value chains in the post-COVID-19 age (No. w2811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utor, D., D. Dorn, and G. H. Hanson(2013),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121-2168.
- _____ (2021), “On the Persistence of the China Shock (No. w2940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aldwin, R. and J. Lopez-Gonzalez(2015), “Supply-chain trade: A portrait of global patterns and several testable hypotheses,” *The World Economy*, 38(11), 1682-1721.
- Baldwin, R. and R. Freeman(2021), “Risks and global supply chains: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No. w2944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nguria, F. and F. Saffie(2019), “Dissecting the Impact of the 2018-2019 Trade War on US Exports,”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505413>
- Benguria, F., J. Choi, D. L. Swenson, and M. Xu(2020), “Anxiety or pain? The impact of tariffs and uncertainty on Chinese firms in the trade war (No. w2792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loom, N., K. Handley, A. Kurmann, and P. Luck(2019), “The impact of chinese trade on us employment: The good, the bad, and the apocryphal,” *2019 Meeting Papers*, 1433,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 Boehm, C. E., A. Flaaen, and N. Pandalai-Nayar(2019), “Input linkages and the transmission of shocks: Firm-level evidence from the 2011 Tōhoku earthquak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1(1), 60-75.
- Bonadio, B., Z. Huo, A. A. Levchenko, and N. Pandalai-Nayar(2021), “Global supply chains in the pandemic,”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3, 103534.

- Borin, A. and M. Mancini(2019), "Measuring what matters in global value chains and value-added trad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8804.
- Bown, C. P.(2020), "How the United States march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o its trade war with China," *East Asian Economic Review*, 24(4), 349-388.
- _____ (2021a), "How COVID-19 medical supply shortages led to extraordinary trade and industrial policy,"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https://doi.org/10.1111/aep.r.12359>
- _____ (2021b), "Anatomy of a Flop: Why Trump's US-China 'Phase One' Trade Deal Fell Shor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atch, February, 8.
- Choi, B. I.(2020), "Global Value Chain in East Asia Under 'New Normal': Ideology-Technology-Institution Nexus," *East Asian Economic Review*, 24(1), 3-30.
- Chor, D. and B. Li(2021), "Illuminating the Effects of the US-China Tariff War on China's Economy (No. w2934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uan, Y., E. Dietzenbacher, X. Jiang, X. Chen and C. Yang(2018), "Why Has China's Vertical Specialization Declined?," *Economic Systems Research*, 30(2), 178-200.
- Eichengreen, B.(2018), *The populist temptation: Economic grievance and political reaction in the modern era*, Oxford University Press.
- Eppinger, P., Gabriel J. F., Oliver K. and Bohdan K.(2021), "Decoupling Global Value Chains,"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848341>
- Evenett, S. and J. Fritz(2021),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FDI: Why Policy Must Be Reset, 27th Global Trade Alert Report," Global Trade Alert.
- Fajgelbaum, P. and A. Khandelwal(2021), "The Economic Impacts of the US-China Trade War (No. w2931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Fang, H., Z. M. Song, H. Tao, and Y. Zhang(2021), "An Anatomy of the Patent Quality: China vs. US," Unpublished working paper.
- Feenstra, R. C. and A. Sasahara(2018), "The 'China shock,' exports and US employment: A global input-output analysi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6(5), 1053-1083.
- Fort, T. C.(2017), "Technology and production fragmentation: Domestic versus foreign sourcing,"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4(2), 650-687.
- Han, P., W. Jiang, and D. Mei(2020), "Mapping us-china technology decoupling,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 Columbia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Forthcoming,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779452>
- Hayakawa, K. and H. Mukunoki(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international trade:

- Evidence from the first shock,”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60, 101135.
- Javorcik, B.(2020), “Global supply chains will not be the same in the post-COVID-19 world,” In COVID-19 and trade policy: Why turning inward won’t work, *CEPR Press*, 111-116.
- Kee, H. L. and H. Tang(2016), “Domestic value added in exports: Theory and firm evidence from China,” *American Economic Review*, 106(6), 1402-1436.
- Kimura, F.(2021a), “GVC resilience: COVID-19 won’t rattle East Asian supply chains,” *East Asia Forum Quarterly*, 13(2), 29-30. <https://search.informit.org/doi/10.3316/infornit.800863755809485>
- _____ (2021b), “The Impact of COVID-19 and the US-China Confrontation on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Seoul Journal of Economics*, 34(1), 27-41.
- Li, X., B. Meng, and Z. Wang(2019),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 Lin, J.(2021), “What does China’s ‘dual circulations’ development paradigm mean and how it can be achieved?” *China Economic Journal*, 14(2), 120-127.
- Lund, S., J. Manyika, J. Woetzel, J. Bughin, M. Krishnan, J. Seong, and M. Muir(2019), “Globalization in transition: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McKinsey Global Institute*.
- Miroudot, S.(2019), “Services and manufacturing in global value chains: Is the distinction obsolete?” *ADB Working Paper Series*, No. 927.
- _____ (2020),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before and after COVID-19,” *East Asian Economic Review*, 24(4), 389-416.
- O’Sullivan, M.(2019), “The Levelling: What’s Next After Globalization,” *PublicAffairs*
- Pei, J., G. de Vries, and M. Zhang(2021), “International trade and Covid-19: City-level evidence from China’s lockdown polic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26. <https://doi.org/10.1111/jors.12559>
- Qiu, L. D., C. Zhan, and X. Wei(2019), “An analysis of the China-US trade war through the lens of the trade literature,”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7(2), 148-168.
- Remes, J., J. Manyika, S. Smit, S. Kohli, V. Fabius, S. Dixon-Fyle, and A. Nakaliuzhnyi (2021), “The consumer demand recovery and lasting effects of COVID-19,” *McKinsey Global Institute*.
- Subramaniam, R. and T. H. Ng(2014), “Beyond Factory Asia: Fuelling Growth in a Changing World,” in B. I. Choi, and C. Rhee ed., *Future of Factory Asia*, ADB/KERI, 1-38.
- Wang, Z., S. J. Wei, X. Yu, and K. Zhu(2018), “Re-examining the effects of trading with

- china on local labor markets: A supply chain perspective (No. w2488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Wei, S. J., Z. Xie, and X. Zhang(2017), “From “Made in China” to “Innovated in China”:
Necessity, prospect, and challeng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1), 49-70.
- WIPO(2019),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9,” WIPO publication.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64>
- World Bank(2020),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Retrieved from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20>
- WTO(2021), “Global trade rebound beats expectations but marked by regional divergences,”
Retrieved from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1_e/pr889_e.htm